

‘대학원중심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대학원중심대학, 그 문제에 대한 小見

김 총 렬

고려대 철학과 교수, 대학원장



1. 우리나라 대학원의 연혁

1) 대학원의 설치와 그 위상

우리나라 대학에 대학원이라는 교육제도
우가 설치된 것은 1947년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1949년 고려대학교, 1950년 연세대
 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등에 도입되면서부터이
 다. 그 당시의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만이
 설치·운영되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1949
 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은 1953년, 연세대학교
 와 이화여자대학교의 대학원은 1954년에 각각
 처음으로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이러한 초기
 대학원에서의 교육은 교육법 시행령을 위주로
 이루어졌을 뿐, 별도의 석사학위 수여규정이
 마련되어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953년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1955년
 에 서울대학교가 대학원 학칙과 학위수여규정
 을 제정하면서부터 대학원 교육은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박사학위의 경우, 본래 미군정 아래에서 제
 정되고 공포된 교육법에는 학사·석사·박사·명
 예박사 등에 관한 학위령 및 그 규정이 있었으
 나, 명예학위 및 구제도에 의한 박사학위수여
 만이 시행됐을 뿐이다. 그러다가 실제로 학자
 를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정
 규 박사학위과정을 실시하게 된 것은 1957년
 서울대학교에 정규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면서
 부터였다. 그리고 1960년대 문교부는 박사학
 위의 권위를 세우고 학문적인 내실을 도모할
 목적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하고, 아울러 그의 수여 종별 및 논문심사

규칙 등을 제정하였다(이 때의 박사학위 수여 규정은 오늘날까지 거의 변함없다). 그 후 10여 년 동안은 이른바 구제박사(일본식 개념의 학위) 과정은 지양되고, 소위 신제박사(미국 학위제도) 과정만이 운영되었다.

이렇게 대학원에 석·박사학위과정의 확립된 이후, 學制上 대학원은 학제의 최종 단계로 도식화되었고, 최고의 학력으로 표시되었으며, 현재도 그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法規上 대학원은 대학에 포함된 부수적인 존재로 취급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어, 그 위상이 자못 모호한 상황에 놓여 있다. 鄭宇鉉의 『우리나라 대학원 학위제도』는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교육체제의 기본이 되는 것은 교육법이다. …… 그런데 이 교육법을 살펴보면, 현행 우리나라 교육체제에서 근간이 되는 것은 대학(학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학원은 대학교육의 부수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어 그 근본 성격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교육법 제81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원이 독립된 하나의 학교로 규정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대학원의 설치 목적에 대한 교육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법상의 대학원 교육의 목적은 교육법 제108조의 규정, 즉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칙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기본 규정에 일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1980년에 개정된 문교부 훈령 제328호 「대학원 규정」 제2조에 규정된 대학원의 목적은 ‘대학원은 대학의 연장선 위에서 …… 교육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심오·정치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학술 연구의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목표를 학문연구에 두고 있고 그 기능은 학자 양성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동 규정 제5조에는

‘대학원의 각 과정에 두는 학과는 그 대학교 또는 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한한다’라고 제한 규정을 두어 학부와와의 연결고리를 단선화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 각과의 교육은 학부의 과 구성원에 의해서 그야말로 학부의 연장선으로 운영되고, 심오한 학문연구와 독창적 학문기초를 위한 지속적인 참신성과 자극이 결여되어 오히려 대학원 교육은 그 활기를 잃고 그저 대학에 기생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어떤 이는 ‘대학원 존재를 그 자체로서 인식하기 보다는 대학의 한갓 부수적인 존재로 보아온 경향이 짙으며, 대학원을 대학의 액세서리 내지는 외형적 장식품 정도로 본다든지, 심지어는 학교 경영의 보조수단으로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통탄한다.”

2) 사회 발전과 대학원 기능의 변화

최근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많은 고급인력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기존 대학들은 정원을 증대하는 데 열을 올렸고, 새로운 대학 및 전문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신설되었다. 이렇게 급작스레 증대된 대학에 필요한 교수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대학원은 그 질적 향상에 주력할 틈도 없이 양적 팽창에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양적으로 배출된 인력 상당수가 과거 대학 졸업생으로 충당되던 직장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직장인들 사이에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풍토가 생겨났고, 대학원은 이러한 비학문적 욕구충족 기능까지도 떠맡아야만 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사회의 새로운 행정제도와 세분화·전문화된 사회 조직기능 등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은 전문적 직업훈련, 고급 경영인의 양성, 그리고 재교육·재충전의 기능 등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원의 출현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 전문대학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59년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전문대학원은 학문적인 교육보다는 실무적인 수준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 훈련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육대상자도 대학 졸업후 일반행정관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자, 공무원, 군인으로서 행정에 관한 광범위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그 사업체의 업무가 행정기관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보다 깊은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들이었다”(鄭宇鉉, 『우리나라 대학원 학위제도』). 이러한 전문대학원 교육의 필요성은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어 사립대학으로서는 최초로 1963년 고려대학교에 경영대학원이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이 경영대학원의 교육 목적은 “경영학·경제학의 이론과 실제를 일층 심오하게 연구하고, 최고경영자로서의 지도적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었다”(鄭宇鉉, 『우리나라 대학원 학위제도』).

이렇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전문적인 분야의 교육을 위해 설치된 전문대학원은 학생이 주로 직장인들인 관계로 야간제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수업연한 및 학점 등 각종 규정들은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규정에 따르는 것이었고, 학위수여 역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종별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후에도 전문대학원은 지속적인 양적 팽창을 보여 왔는데, 국·공립대학보다는 주로 사립대학에 많이 설립되었다. (1987년도 문교부 통계에 따르면, 그때 이미 132개의 전문대학원이 설치되었고, 그 중 103개가 사립대학교에 설립되었다.) 이렇게 주로 사립대학에 전문대학원이 많이 설립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쌓고자 하는 열망에 대한 호응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학교의 재정을 확충하려는 계산적인 의도에서 기인하였다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다. 전문대학원이 학문계열별로 설치된 상황을 살펴보면, 교육학·행정학·경영

학·산업 계열 등 무려 30여 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공계 전문대학원 수는 극히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특별한 시설이나 실험실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에만 집중하여 대학의 경영상 주수입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鄭宇鉉, 『우리나라 대학원 학위제도』).

이렇게 전문대학원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정작 발전시켜야 할 이공계열 전문대학원의 설립은 막대한 투자와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국가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그 안에 석·박사학위 과정을 두어 전문대학원이면서도 일반대학원과 같이 단독 대학 규모로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전 포항공과대학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대학의 설립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 산업체가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차원을 달리하면서 그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 고급 과학기술 인력들을 양성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국들과 견줄 수 있는 과학기술의 자체 개발과 창조라는 원대한 목표를 실현하고, 급박한 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교육이 지향해야 할 한 모델 내지는 건인차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주체로 부상하게 되었다.

2. 대학원중심대학으로의 전환과 그 문제점

1) 대학원중심대학의 당위성

우리나라 대학은 중앙행정부의 획일적인 통제 아래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의 각 대학에서 그 대학 고유의 개성과 특성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마치 외형적으로 갖출 것은 모두 갖추고 있는 백화점처럼 규모에서 大·小의 차이만 구별될 뿐 그 내용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과를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사회적 수요나 학문적으로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학과를 ‘爲人設官’하듯 개설한 것이 많아 고등교육 차원에서의 낭비적 요소가 적지 않게 누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대학개혁은 바로 이렇게 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구성된 대학을 정돈하여 학교마다의 학문적 특성을 살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편제의 개혁에는, 대학원과의 학제적인 연결 및 진급(進級)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학 안의 전반적 개혁 일환으로 대학원 개혁이 포함되었다.

즉, 지금까지의 대학 중심 학사편제로 세분화·나열화된 학과들을 통·폐합해서 계열 또는 학부로 할 경우, 학문적 전공분야의 세분화는 대학원에 가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때 지금의 학부교육은 결국 폭넓은 교양과정으로 전환되고, 지금의 대학에서 교육되는 전공학문은 대학원에서 심화·연구될 것이다. 그리하여 학문의 질적 측면에서 볼 때는 대학원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이 되고, 학사편제(행정체계)로 보아서는 이제까지 대학의 부속적 존재로 여겨졌던 대학원의 위상이 대학의 상위에 위치하여 명실상부한 최종 학교로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대학원중심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학원중심대학은, 대학의 행정편제 및 학사편제가 대학원을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이며, 학문연구가 대학원에서 심화됨으로써 종래의 좁은 범위 내에서의 강의 위주에서 연구 위주로 전환되어, 그 본질 면에서 동시에 연구중심대학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지금의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은 이전에 학부에서 이루어진 전공성을 살리는 동시에 종래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던 학문연구의 심화와 창조 기능을 감당하기에 그 질량 면에

서 충분한가? 필자가 보기에, 거의 모든 대학들이 대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해 왔기 때문에 학부전공에 맞추어 대학원의 과를 증설하고, 이제까지 사회 재교육 차원에서 운영되던 전문대학원을 각 해당 대학과 연결시킨다면, 큰 무리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 형편상 재정에 도움이 되는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만 치중하여 설치·운영해 왔을 뿐,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이공계 및 자연계 전문대학원은 외면해 왔기 때문에 대학원중심대학(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할 때 가장 취약한 분야는 곧 이공계 및 자연계 대학원이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각 대학교를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유도하면서 유독 ‘국책대학원안’을 설정하여 이공대학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각 대학들로 하여금 이공계 대학원 설치를 유도하는 것도 이러한 대학원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안다.

2) 연구중심대학의 문제점

교육부 안에 따르자면, 대학원중심대학은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등 세 종류로 분류되며, 각 대학원의 특징은 연구중점대학원·교육중점대학원·산업기술중점대학원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특성 분류와 중점 규정이 각 대학내에 모두 수용될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필자의 생각에 교육부는 대학의 특성화 및 다양화를 살리되, 그것을 국가 정책으로 유도하기 위해 적어도 중점규정대학원에 있어서는 대학마다 선택하여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다. 대략 정의하면, 일반대학원은 순수학문연구에 목적을 두고, 전문대학원은 주로 자격증을 소지하는 전문인재 양성과 그의 재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특수대학원은 자연과학, 특히 과학기술의 연구·창조에 역점을 두는 대학원으로서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 일반대학 안에 새로이 개설되는 대학원인 듯하다. 이외에 정부는 단설대학원 설치를 가능케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일반대학원에서는 빠져있는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일부(즉, 문화·예술면)의 개설을 권장하여 대학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아울러 국가의 정책 수행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인 듯하다.

교육기관이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번 돈을 투자하는 기관이다. 특히 자연과학의 경우, 연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연구의 심화와 새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새로운 실험기구를 도입해야만 한다. 이러한 자연과학에서의 시설 투자에는 막대한 돈이 들고, 아울러 여기에는 많은 고급 연구인력이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또한 막대하게 소요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대학들은 거의 등록금에 의존해서 운영되어 온 형편이었다. 특히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경우, 시설이나 연구에의 투자는 고사하고 싼 강사료만으로 운영하여 학교재정의 한 내원으로 삼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 대학원 중심대학이 되고 대학의 기능이 한층 심오한 학문연구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 대학은 대학재정의 일대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변모되려면, 과거와 같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주로 하는 교수생활에서 강의를 충실히 하되, 연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쏟는 교수생활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수에 비례한 교수수의 확충 및 교수의 연구 활동을 도와주는 대학원생 조교의 증원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한다. 아울러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함은 물론 연구보조원인 대학원생에게까지도 장학금 내지 연구비, 생활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학원생으로부터 등록금을 받아(학부생보다도 많은 등록금) 왔지만, 이제는 도리어 대학원생

을 위한 시설증대와 생활보조로서의 연구비를 지급해야 하니, 이것은 곧 대학이 이중의 재정 부담을 짊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요언하면, 현재의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변모하려면, 우선 교수의 획기적인 확충(최소한 학생수 대 교수수가 20:1 내지 10:1)이 이루어져야 하고, 확충된 교수수에 비례해서 대학원생 정원 또한 획기적으로 증원(교수수 대 대학원생 수가 1:5)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교수 및 연구인원(대학원생)의 증대를 위해서는 학교의 재정 투자에서 지금보다 대략 어렵잡아 4, 5배 정도는 늘어나야만 한다. 따라서 대학원중심대학 혹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바로 이 재정확보에 있는 것이다.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구 공간과 생활 공간을 늘리는 데 일시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종래 등록금을 학교의 다른 재정으로 돌리던 것을 자체적으로 전용하면 그리 큰 재정투자 없이도 점차 확대해 갈 수 있다. 그렇지만 특수대학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의 재정운영상 그야말로 혁명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특수대학원의 운영에는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재정지원은 그야말로 낚싯밥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선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고 빈약한 사학재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보니, 결국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재벌기업체들과 제휴하여 그곳에서 돈을 염출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미 각 재벌그룹들 역시 자체적으로 필요한 연구기관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정된 재벌그룹의 수에 비해 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청하는 대학들은 많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다. 따라서 과거 안일한 자세로 정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왔던 대학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게다가 국가에서 이미 단설대학원의 설치를 허락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벌그룹들은 과거 남의 대학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여 그들의 연구에만 의존하였던 관행에서 벗어나 그 돈으로 자기 나름의 연구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렇기 때문에 사립대학교가 특수대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우선 그 막대한 재정부담이라는 걸림돌로 인해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 대학들은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대학원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특히 사립대학들, 그것도 이른바 상위권에 속하는 대학들은 그 선택을 놓고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립대학이 있으니 사립대학 전부를 특수대학원, 대학원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으로 유도하려고 하지는 않고, 대학의 규모나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올라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학들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선발기준에서 탈락되면 대학의 일반적 평가와 국내의 위상에서 침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은 가히 사활·성패의 기로에서 있는 것과는 같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사립대학은 꼭 ‘대학원중심대학’, ‘연구중심의 특수대학원’으로 되어야만 하나

1) 大學觀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고, 많고, 상위에 있는 것들을 가치있고 위대한 것으로 신봉하면서 이를 추구한다.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의식은 대학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과대학보다는

종합대학, 그것도 모든 학과를 갖춘 대규모 종합대학을 우선시하고, 학생수가 많고 역사가 오래된 대학을 선호한다. 그래서 전문학교도 대학이라는 이름이 붙어야만 학생들이 지원하며, 단과대학은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종합대학은 으레 의과대학을 설치해야만 비로소 명실상부한 대학으로 인정받는 듯이 일을 추진해 왔다. 그러고서 대학의 발전을 말할 때, 마치 그의 양적 확대가 곧 발전인 것처럼 과시한다. 이렇게 되자 질적 향상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대학간 경쟁은 바로 양적으로 큰 대학을 만들기 위한 정원 늘리기에 경주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모든 대학들의 규모나 설치된 학과들은 거의 획일화되었으며, 학문수준 또한 점차 평준화되는 추세에 놓이게 되었다.

이번에 각 대학들이 대학원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고민하는 이유도 진정한 대학의 학문적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객관적 평가 기준에서 탈락되지 않느냐 하는 대학의 외재적 체면이나 위상 문제에 고민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 대학들은 대학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대학원을 대학의 부수적 존재로 방치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대학원이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에 월등히 많이 집중 개설되어 운영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연구시설에 투자를 게을리 하고 그저 이름만 갖추는 데 급급하였는데도 그것이 사회일반에게 지 통용된 것은, 사회일반 역시 그러한 명분 갖추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양적·외형적 확장이나 형식적 명분에 사로잡히는 병폐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연 대학은 반드시 대학원 과정을 두어야 하고,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 연구중심대학을 선택해야만 하는지를 냉정한 자세로 되짚어보는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상적인 대학의 모습을 거론할 때,

반드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발전 모델로 삼는다. 그렇지만 필자가 알기로, 미국내에서 꼭 대학의 규모가 크고 종합대학이어야만 명문대학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단과대학의 경우도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곳이 많다. 예를 들어 스위스모어 대학(Swarthmore College)의 경우, 비록 대학원이 없는 단과대학이지만 그 대학 출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교수가 미국에서 세번째로 많을 만큼 뛰어난 대학자와 과학자를 배출한 우수한 명문대학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실은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들은 많은 재정투자를 필요로 하는 자연과학계열의 과학기술연구중심대학원을 선호하지 않으며, 과학기술연구에 필요한 대학 및 연구소는 주로 주립대학 쪽에서 떠맡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도 종합대학 혹은 단과대학이라는 대학의 격을 조정하고, 대학원중심대학을 소수화하며, 각 대학마다의 특징(학문적 우월성)을 갖추게 하여 규모와 형식 측면의 경쟁에서 벗어나 학문의 질과 특징에서 대학각자의 존재 의의와 위상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공과대학 및 특수대학원은 주로 국립대학 및 재단이 튼튼한 사립대학에서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연과학계열의 특수대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현실적 수요, 즉 국가가 지향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제철산업체가 요구하는 경제적 응용과학 등에 치중한 대학원만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즉, 아무런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순수학문으로 과학을 탐구하는 대학 본래 모습으로의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대학원 설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 학문이 궁극적으로 향상·발전되고, 새로운 발견과 창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순수 기초학문연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2) 국가의 투자 확대와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
 오늘날 국가와 사회 그리고 산업체들이 대학에 가하고 있는 압력과 체찍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대학은 대학 자체의 발전 명목으로 국가, 사회, 기업가들의 도움을 받아 왔으나, 이제부터는 대학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입장과 시기에 봉착한 것이다. 말하자면 빛만 지던 대학이 이제 그 빛을 झा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아직도 거대해진 자기 체구를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커다란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문연구를 위한 제반 여건이 역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형편이다. 또한 국가의 정책에 의해 대학원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면서도 많은 면에서 대학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곧 아직도 많은 속박에 얽매어 있는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빨리 약진하라는 체찍을 받고 있는 꼴인 것이다.

정부는 대학들을 대학원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으로 유도하면서도 대학원생 정원을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사립대학들이 학교운영의 재정도를 70% 이상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필요로 하는 문제만 안겨줄 뿐, 정작 재정의 주요 내원이 되는 등록금은 여전히 일률적으로 묶어놓고 있다. 그렇다고 국가가 획기적으로 사립대학의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학가에서도 부실기업이나 재정자립도가 허약해서 도산되는 기업체처럼 문을 닫는 대학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대학이 자기 나름의 힘으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학의 제반 운영, 특히 학제통제, 정원동결, 등록금 규제 등을 과감히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학교수 봉급의 경우, 미국 일반대학교수의 봉급과 비교해서 그

리 큰 차이는 없지만(경영·과학·의학 분야의 교수를 제외하고), 학생 등록금에서는 사립대학의 경우 미국 사립대에 비해 1/4 내지 1/5에 불과하다. 그러니 교수 1인당 30명 내지 40명의 학생이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이제 미국 대학들에 버금가는 교육과 학문연구의 질을 이룩하려면, 학생 등록금도 미국 학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은 수혜자 부담 원칙을 따지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의 사회주의식 국가교육처럼 국가가 많은 교육비를 사립대학교에도 지원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대학도 이제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경쟁을 통해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교수 봉급이나 학생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묶어 둘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수준과 학문의 질, 명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든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내적으로는 자기개혁을 통한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실력경쟁을 통해 국가사회 산업체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내야만 지탱해 갈 수 있는, 대학 운영에 근본적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대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여기서 대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서 다음 몇 가지의 조언을 제시한다.

첫째, 교육부는 대학원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해 가는 데 필요한 법 개정과 명확한 행정적 지도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규제정보다는 봉사행정·지원행정 등을 펴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둘째, 대학들은 종래의 피동적이고 타성과 안일에 빠진 재정 운영과 학사관리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체질과 전통에 맞는 특성 및 무리없이 실천가능한 대학체제를 선택하여 자기 대학만이 갖는 大學像을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교수들은 대학당국의 학사행정에 의존하여 상아탑 속에서 안주하던 靜的 연구에서 벗어나, 밖으로 향해 국가와 사회의 실제적인 문제와 접촉하면서 그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하며, 크게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여 국민적 의식을 환기하는 실질적·실천적인, 즉 動的 연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

김충렬/국립 대안대 철학과와 등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문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문화대·경북대·계명대 교수와 한국철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중국철학산고 I·II』, 『유가운리강의』 등이 있다.